

현안과 과제

“경제·사회·문화 교류가 긴장완화의 해법이다”

— 남북 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—

○ (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) 전반적으로 추가도발 가능성이 높고, 특히 3차 핵실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응답

- 전체 74명의 전문가 중 상당수인 77.1%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
 - 또한 사이버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67.6%가,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은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66.3%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응답,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
 - 성향별로는 진보성향이 3차 핵실험을 포함한 전반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해, 비교적 낮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
- 2011년 2분기 김 위원장 일가 표적지 사격 훈련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될 당시와 비교해보면, 특히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율이 증가(61.1%→77.1%)
 - 이는 북한이 광명성 3호 실패 만회를 위한 주민 결속 강화, 핵보유국으로서의 협상력 제고,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강화에 대한 반발로 그 가능성이 증대된 것으로 해석

추가도발 가능성		2011.8	2012.5			
			종합	보수	중도	진보
3차 핵실험	매우 크다	10.4%	25.7%	28.0%	33.3%	10.5%
	크다	50.7%	51.4%	56.0%	56.7%	36.8%
	별로 없다	38.8%	23.0%	16.0%	10.0%	52.6%
	전혀 없다	-	0.0%	0.0%	0.0%	0.0%
추가 미사일 발사	매우 크다	10.4%	8.1%	16.0%	6.7%	0.0%
	크다	56.7%	48.6%	52.0%	50.0%	42.1%
	별로 없다	32.8%	41.9%	28.0%	43.3%	57.9%
	전혀 없다	-	1.4%	4.0%	0.0%	0.0%
군사도발	매우 크다	6.0%	12.2%	16.0%	13.3%	5.3%
	크다	40.3%	54.1%	60.0%	56.7%	42.1%
	별로 없다	53.7%	32.4%	20.0%	30.0%	52.6%
	전혀 없다	-	1.4%	4.0%	0.0%	0.0%
사이버 테러	매우 크다	-	17.6%	24.0%	20.0%	5.3%
	크다	-	50.0%	64.0%	53.3%	26.3%
	별로 없다	-	29.7%	12.0%	23.3%	63.2%
	전혀 없다	-	2.7%	0.0%	3.3%	5.3%

○ (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) 전문가의 과반수는 긴장완화를 위해 다양한 대화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

- 전문가의 52.7%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'긴장완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 구축'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
 - 이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북강경제재의 효과가 크지 않았고,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 강경대응 보다는 관련국과의 다양한 대화채널을 우선 구축하여 북한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해석
 - 정치성향별로 응답률에 차이가 있었는데, 보수 성향(48.0%)의 과반수는 '강력한 대북제재'에 무게를 실은 반면, 중도(56.7%)와 진보(68.4%)는 대부분 '대화 채널 구축을 통해 대응'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음

광명성 3호 발사와 우리정부의 대응	종합	보수	중도	진보
긴장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화채널을 구축한다	52.7%	36.0%	56.7%	68.4%
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서야 한다	25.7%	48.0%	16.7%	10.5%
남북대화도 대북제재도 하지 않고 당분간 냉각기를 갖는다	21.6%	16.0%	26.7%	21.1%

○ (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우리정부의 대응) 군사적 맞대응보다는 정치·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

-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우리정부는 자체 군사력 증강 등의 군사적 맞대응보다는 대화·평화적 대응(51.4%)과 한미공조 강화(32.4%)가 필요하다고 응답
 - 성향별로는 진보성향(78.9%)과 중도성향(63.3%)의 상당수가 대화·평화적 대응에 높게 응답한 반면, 보수성향(60.0%)의 상당수는 한미공조의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

북한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	종합	보수	중도	진보
군사적 맞대응보다는 대화·평화적 대응을 해야한다	51.4%	16.0%	63.3%	78.9%
한미공조를 통하여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	32.4%	60.0%	23.3%	10.5%
자체 군사력 증강으로 대응해야 한다	16.2%	24.0%	13.3%	10.5%

2) 김정은 체제의 전망

○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, 경제난 해결을 위해 제한적인 개혁·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

○ (김정은 체제의 안정성) 전문가의 상당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

- 전체 74명의 전문가 중 77.0%가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대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
- 이는 단기간에 노동당 제1비서 및 제1국방위원장에 추대되었지만, 권력승계 절차가 김정일 위원장에 비해 짧았고, 지나치게 유훈통치를 강조한 것을 보아 여전히 권력을 완벽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
- 2011년 1분기 조사에서 전문가의 81.4%는 ‘김정은이 후계자로서의 지위는 획득하나,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’고 응답한 적 있음

김정은 체제의 안정성	종합	보수	중도	진보
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	77.0%	72.0%	86.7%	68.4%
안정기조에 접어들었다	23.0%	28.0%	13.3%	31.6%

○ (북한의 경제 개혁·개방) 전문가의 절대다수는 북한이 제한적으로 개혁·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응답

- 전문가의 절대다수인 95.9%는 김정은 체제가 경제난 타개를 위해 경제 개혁·개방을 실시할 것이며, 체제유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응답
- 특히 최근 들어 경제법의 대대적인 수정, 당 대표자회의 및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 중요성 강조, 김정은의 자본주의 활용 발언 등이 응답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
- 전 분기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개혁·개방에 대해 ‘점차 확대할 것이다’(56.9%)와 ‘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’(40.3%)로 응답한 적 있음

북한의 경제 개혁·개방	종합	보수	중도	진보
제한적으로 개혁·개방 추진	95.9%	96.0%	96.7%	94.7%
오히려 축소할 것	2.7%	4.0%	0.0%	5.3%
본격적으로 개혁·개방 확대 추진	1.4%	0.0%	3.3%	0.0%

○ (김정은 체제 하에서의 현 정부와의 남북경협 전망) 전문가의 상당수는 남북경협은 현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응답

- 전문가의 상당수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남북경협은 현 수준과 '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'(78.4%)으로 응답
- 이는 광명성 3호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어 당분간 남북경협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지만, 남북경협이 북한에 경제난 해결과 체제유지를 위해 이득이 되기 때문에 포기할 가능성은 낮고, 이에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다리겠다는 의미로 해석

김정은 체제하의 현 정부와 남북경협	종합	보수	중도	진보
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	78.4%	88.0%	70.0%	78.9%
현 수준보다 좋아질 것이다	12.2%	8.0%	16.7%	10.5%
더 악화될 것이다	9.5%	4.0%	13.3%	10.5%

3) 대북정책 전망과 과제

○ 현 정부 임기 내 정책전환은 힘들지만, 그래도 임기 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 확대와 금강산 관광재개 등의 경제 및 사회문화 부문의 교류가 시급하다고 지적

○ (현 정부 임기 내 대북정책 전환 가능성)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현 정부는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

- 전문가의 86.5%는 현 정부가 대북정책 전환보다는 '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'으로 응답
- 이는 임기 말 대북정책 전환은 실효성이 적고, 남북관계 개선 여지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미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
- 정치성향별로도 큰 차이가 없지만, 진보성향(94.7%)이 유지가능성에 비교적 높게 응답

현 정부 내 대북정책 전환	종합	보수	중도	진보
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	86.5%	84.0%	83.3%	94.7%
전면 수정이 아니더라도 유연하게 수정할 것이다	13.5%	16.0%	16.7%	5.3%
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이다	0.0%	0.0%	0.0%	0.0%

○ (금강산 관광과 같은 상징적 개선조치) 전문가의 상당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현 정부 내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필요하다고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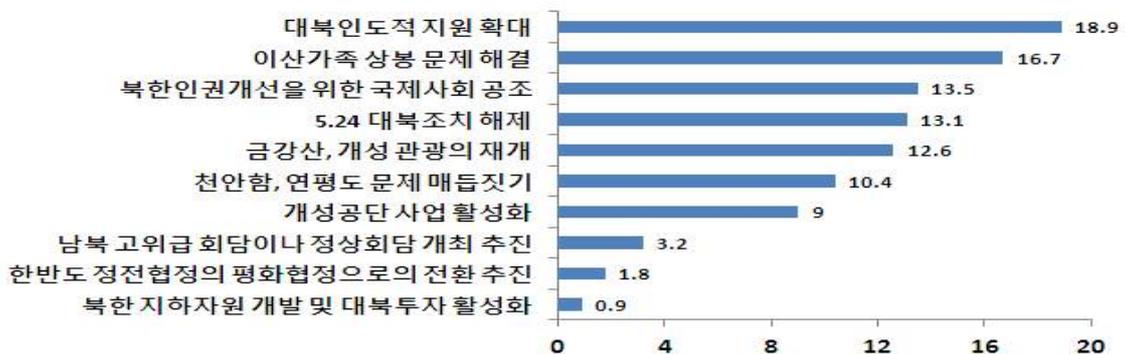
-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현 정부 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(68.9%)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
- 정치성향별로 응답률이 달랐는데, 보수(52.0%)는 ‘재개할 필요가 없다’에 응답률이 비교적 높아, 중도(76.7%)와 진보(84.2%)성향과 차이를 보임

금강산 관광 재개	종합	보수	중도	진보
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	68.9%	48.0%	76.7%	84.2%
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필요 없다	31.1%	52.0%	23.3%	15.8%

○ (현 정부 임기 내 꼭 실천했으면 하는 과제) ‘대북 인도적 지원’이나 ‘5.24 대북 조치 해제’ 등 ‘비정치적 부문’에서의 관계개선이 꼭 실천되어야 한다고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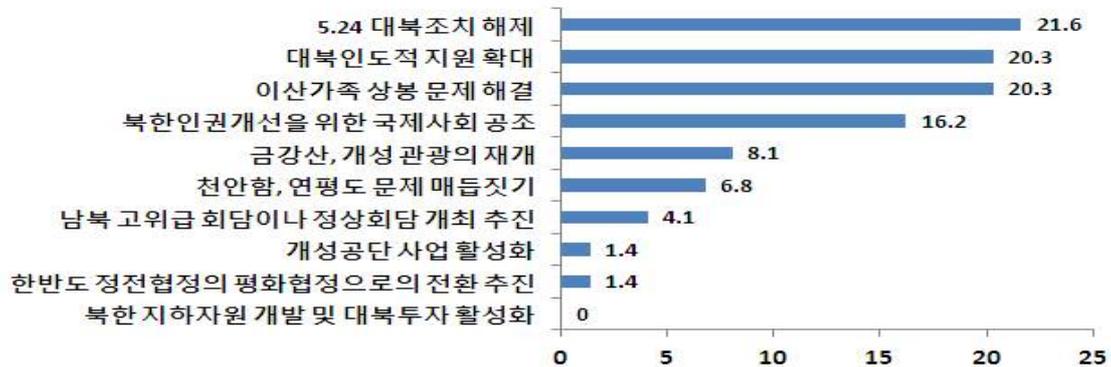
- 남은 임기 동안 현 정부가 이것만은 꼭 실천했으면 하는 과제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, 전체 응답 가운데 ‘대북 인도적 지원확대’(18.9%)와 ‘이산가족 문제 해결’(16.7%)이 높은 응답률을 보임
- 다음으로는 ‘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’(13.5%), ‘5.24 대북조치 해제’(13.1%), ‘금강산, 개성관광의 재개’(12.6%)에 비교적 높게 응답
- 전 분기 조사에서는 북한관련 현안의 시급성을 묻는 질문에 ‘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’와 ‘이산가족 문제 해결’이 각각 81.9%의 높은 응답률을 보인바 있음
- 현재 남북관계 경색을 고려하여 사회문화나 경제교류와 같은 비정치적 부문에서의 관계 개선이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(영역별 응답률 사회문화 49.1%, 경제 35.6%, 정치외교 15.4%)

< 현 정부 임기 내 꼭 실천했으면 하는 과제 - 종합 >



- (1순위 응답) 전체 가운데 '5.24 대북조치 해제'(21.6%)가 비교적 높은 응답
 - 다음으로 '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'와 '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'이 각각 20.3%로, '5.24 대북조치 해제'와 큰 차이 없이 높은 응답률을 보임
 - 차기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현 정부 임기 내 5.24조치 해결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
 - 한편 5.24조치로 남북경제협력이 제한되는 가운데 북중경제협력이 확대·지속될 경우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임

< 현 정부 임기 내 꼭 실천했으면 하는 과제 - 1순위 >



○ (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)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대화를 통한 화해협력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

-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전문가의 절대 다수(87.8%)는 대화를 통한 화해협력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
 - 성향별로는 중도 성향(93.3%)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, 보수 성향(80.0%)의 대다수도 화해협력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
 - 이는 지난 1분기의 전면 재검토(58.3%), 기본틀은 유지하되 수정, 보완(41.7%)해야 한다는 결과와 유사

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	종합	보수	중도	진보
대화를 통한 화해협력 기조로 전환	87.8%	80.0%	93.3%	89.5%
기존의 대북정책 기조 유지	12.2%	20.0%	6.7%	10.5%

이용화 선임연구원(yhlee@hri.co.kr, 02-2072-6222)
 홍순직 수석연구위원(sjhong@hri.co.kr, 02-2072-6221)